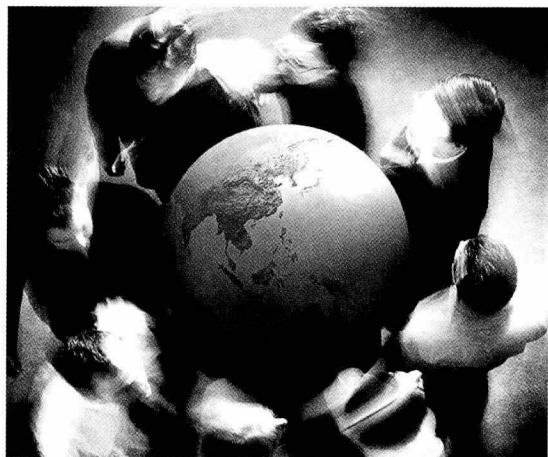


정통부, IT 신성장 전략 범국가적 추진



“

지식정보화로 국민 참여사회를 만들고,
IT로 변화와 개혁을 촉진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IT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3대 기본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3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보통신부 주요 현안업무와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식정보화로 국민 참여사회를 만들고, IT로 변화와 개혁을 촉진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IT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3대 기본 정책을 중점 추진해 우리나라를 정보통신 일등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TV와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텔레메티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을 정보기술(IT) 산업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 오는 2007년까지 IT 생산 400조원, 수출 1000억 달러를 이뤄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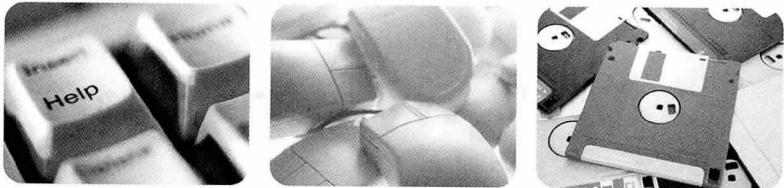
또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서비스를 올해 서울 지역부터 우선 실시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IMT-2000 휴대전화와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에 보조금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사이버 인권침해 문제를 막기 위한 인터넷 계시판 실명제는 우선 공공기관부터 도입한 뒤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민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IT 신성장 전략과 관련, 디지털TV 방송 전국망을 2005년까지 완성하는 한편,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데 오는 2007년까지 1조6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IT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창업지원 제도를 정비, 성장유망 기업에 집중 지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방민원 시대를 다지기 위해 오는 2006년까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민원으로 확대하



고, 휴대전화 등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정부(M-Government)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날로 심해지는 사이버공격을 막기 위해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오는 2007년까지 국민 600만 명에게 국민 정보보호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 IT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

앞으로 5~10년 간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될 신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기기 분야에서는 3세대 이동통신, 디지털TV, 포스트PC, 지능형 로봇이, IT부품 분야에서는 IT관련 SoC(시스템온칩) 등 신개념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에서는 디지털콘텐츠, 임베디드SW, 텔리매틱스를 선정·육성해 오는 2007년까지 IT생산 400조원, 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스트PC시대에 대비한 용·복합 기기와 관련 부품(SoC·디스플레이·배터리), IT기술의 결정체인 지능형 로봇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한다.

또 디지털TV방송 전국망을 2005년에 완성하는 한편, DMB서비스와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올해 도입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2007년까지 1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IT 산업 국제경쟁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가 R&D(연구개발)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해외 국가설명회(IR) 활동을 강화해 수출을 늘리고 외국 일류기업 R&D연구소를 국내에 유치할 예정이다.

◆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대만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요인을 벤치마킹해 지난해 현재 생산 53조원, 수출 126억 달러를 담당하는 IT중소·벤처기업이 오는 2007년 생산 110조원, 수출 310억 달러를 이루도록 지원한다.

또 창업보다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현행 창업지원 제도를 정비, 성장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도록 하고, 퇴출계획(Exit Plan) 등으로 인수합병(M&A)을 활발하게 추진한다.

공동구매·콜센터 설치 지원과 지역적 집적화와 특성화 촉진 등으로 기업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개발 지원과 우수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 2GHz 대역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도입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IMT2000)연기·축소 논란과 관련, 차세대 이동통신산업 경쟁력을 지키면서 통신사업자 투자부담을 줄이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서울지역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고, 전국 확대는 여전 변화를 봐가며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당초 허가조건대로 통신망 공동 구축·활용을 이끌어 중복 투자를 억제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해 3세대 서비스용 휴대전화와 PDA 등에 대해 보조금을 일부 혜용한다는 방침이다.